

“사법농단, 국민신뢰 뿌리째 흔들어… 스스로 바로 잡아야”

文 대통령,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사법부, 국민주권 실현 핵심수단
법과 함께 韓 민주주의도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기념식 외에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이고, 정의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라며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에 의

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의 국가배상청구 제한 위헌 판결(1971년)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킨 6월 민주항쟁(1987년) ▲소장판사 430여 명의 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 선언

(1988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40여 명의 사법부 자기반성 촉구 및 법원 독립성 확보 요구(1993년) 등의 과정을 차례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법원은 재심 판결 등을 통해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왔고 군부독재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기관이 저질렀던 범죄의 청산도 지속적으로 이뤄오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그와 함께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로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며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로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법원은 ‘사법발전위원회’를,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해 사법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일선 법관들의 진정성 있는 개혁 노력에서 사법부의 희망을 볼 것”이라며 “(법관) 한 분 한 분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 쏟는 정성,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절박함이 법원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인권변호사로서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한승현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76년 당시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대해 분명한 논리로 무죄 판결을 선고해 법관으로서 양심과 용기 를 보여준 고 이영구 판사, 한국사회여성 인권 증진에 힘쓴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 교수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각각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김명수 “사법행정 영역 수사 적극 협조”

〈대법원장〉

“현안 관리자 엄정 문책 필요”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인 사법부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지난 시절의 과오와 완전히 절연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화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다”며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제도 개혁에 더욱 전력하겠다

는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이루는 것이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법관의 관료화와 권위주의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관 승진제도를 폐지하고,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의 전면적·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관이 권리이나 사법행정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재판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 개혁 방안에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외부 목소리를 반영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병종 기자 joker@



14일 개소식을 하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왼쪽)와 숙소 전경.

/연합뉴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오늘 문 활짝

당국자 상주 365일 24시간 소통
남측 30명·북측 20명 정도 상주

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개보수해 마련됐다. 개성공단 내 위치한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로 연면적 4498.57m² 규모다.

2층에 남측사무실, 4층에 북측 사무실이 있으며 3층 회담장에서 수시로 만나게 되는 구조다. 1층은 교육장과 안내실 등으로 사용된다.

우리 직원 숙소로는 역시 교류협력협의사무소 숙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개보수해 이용하기로 했다. VIP룸 4실을 포함해 총 44개의 방이 있다.

전기는 남측에서 배전방식으로 공급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진전상황을 봐가며 향후 연락사무소를 발전시켜 서울·평양 상호대표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물품과 유류 등의 지원이 유엔(UN)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남북 대화의 물꼬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안보대화(SDD) 기조연설에서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해 “분단 이후 최초로 양측은 이제 더 이상 만남 그 자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지 않아도 되는 상시연락체계를 갖게 된 것”이라며 “공동연락사무소는 남북관계 제도화의 획기적인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승호 기자

“핵물질·시설 등 포기하는 것, 北이 할 일”

文 대통령, 정상회담 준비위 오찬

북미, 신뢰 확인… 비관적 상황 아냐
비핵화 ‘상응조치’가 우리의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이제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일은 미래 핵뿐이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한 핵물질·핵시설·핵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초청 오찬에서 “북한은 핵·미사일을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는 작업을 포기했다고 할 수 있다. 미래 핵을 포기하고 그런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고 이를 위해 여러 실천적 조치를 했다”며 “핵·미사일(개발), 추가 실험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실제로 작년 11월 이후 도발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도 미국 전략자산이 실리는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며 “그에 대해 유해 송환이나 9·9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을 동원하지 않는 등 여러 성의를 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낮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기 위해 좌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오른쪽)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임종석 비서실장.

/연합뉴스

였다”고 했다.

특히 “북한은 미국에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자신은 ‘여러 조치를 진정성 있게 했는데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하지 않거나, 북한이 취한 조치는 하나하나 불가역적 조치인데 군사훈련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조치 아니냐, 그러니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게 북미 교착의 원인 같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비록 실무회담은 부진한 면이 있지만, 북미 양 정상은 신뢰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며 “북미 모두가 하지 않겠

다는 게 아니라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 미래와 현재 핵을 폐기하겠다는 것이고, 미국도 체제보장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상대에게 먼저 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막혀있는 것이어서 충분히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접점을 찾아 시행하고 대화를 재추진시켜 비핵화를 하고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가 어느 정도 교착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과 석 달 전에 역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이 마주 앉아 회담하고 합의안을 내놨고, 미국 무장관이 북한을 세 차례나 방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는 보기에 따라 속도가 느리다는 분도 계시고 빠르다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구상했던 방향보다 오히려 활발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저로서는 이번에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인데 사실 제가 취임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세 번이나 만나게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앞서 남측과의 연락을 위한 통신망도 회선 설치했다.

연락사무소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긴급한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연락수단이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사무소 청사는 과거 남북교류협력협의